

“코로나19 안정, 수도권에 달렸다”

文 대통령, 국무·방역 대책회의 “방역수칙 지키면 감염 막을수 있어 20일째 추경 심의 착수못해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이어지자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하겠다”며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한편, 경제 상황도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관련해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 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됐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이 잘 이뤄지는 것은) 국민께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등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수록)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슈퍼곡물 ‘헴프시드’ 국산품종 개발 박차

농진청, 건기식·화장품 원료 이용

농촌진흥청이 최근 ‘대마 씨앗’ (헴프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우수한 대마 품종을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마(大麻)는 뽕나무과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으로 불리며 오래 전부터 수이나 상복을 만드는 삼베 원료인 섬유작물로 이용돼 왔다. 1960년대 도취(환각)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마초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정부는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대마 단속을 시작했다. 법적 규제로 인해 금기시하던 대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헴프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헴프시드는 법적 규제 대상인 대마초와 달리 도취 성분(THC)이 거의 들

어있지 않다. 씨앗 껍질을 벗겨내 도취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 원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헴프시드를 어린이 과자나 노인 간식에 첨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미국 타임지는 헴프시드를 6대 슈퍼 곡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 대마 씨앗과 대마 씨유(기름)에 대한 THC 허용 함량을 각각 1kg당 5mg 이하, 10mg 이하로 고시해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2016년에는 껍질을 제거한 대마 씨앗을 안전식품으로 규정했다.

헴프시드에는 우리 몸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다.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해 20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돼 있다. /한용수 기자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분리 추진

전준위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 준비 차원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분리,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관련 규정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8·29 전당대회 준비 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최고위원 임기 규정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안건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준위에서 논의한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 의결로 처리된다.

전당대회에 앞서 전준위가 최고위원 임기 규정과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먼저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대한 주자들이 출마에 나선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경우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 역시 동반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당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규에서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또 온라인 기반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는 1만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실내에서 치른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장철민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6일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개최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전국대의원을 전부 모으는 현장집회보다, 중앙위원 현장집회로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

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당대의원대회 역시 상무위원 현장집회를 권고하는 것으로 심의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준위 설명에 따르면 기존 전당대회 현장 행사가 1만명에서 500~600명 규모의 중앙위원 현장 집회로 축소해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고위원 임기 보장이나 전당대회를 온라인 기반으로 치르는 등 안건에 대해 오늘(23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4차 회의에서 논의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산업부, 미용목적 LED마스크 안전기준 만든다

미용·의료용 제품 구분관리 등 예비 안전기준 오늘 우선공고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새로 마련된 공통 안전기준을 보면,



LED 마스크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

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 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의 경우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하고 이를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급증... 국내유입 비상

농식품부, 전문가와 협의 대책마련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올 겨울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방역상황 점검을 위해 23일 충북 청주 소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민관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헝가리와 폴란드 등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 발생 중

이며, 중국과 대만 등 우리 주변국을 비롯해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대학 교수, 현장수의사, 철새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해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긴급행동지침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발생 상황과 철새 이동 시기 등을 고려하면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위

험시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새와 축산차량 등 농가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주요 전파 매개체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이기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가 방역과 소독시설 일제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겨울 전 모두 보완하고 9월부터 철새도래지에 축산 차량 출입 통제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국 가금농가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hys@m